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62호
2020.6.22

정책동향

- 6·17 대책...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까
- 2021년도 SOC 예산 요구안 24.4조원
-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산업정보

- 2020년 1/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건설논단

- 추경, 효과 검증은 필수

6·17 대책...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까

- 지역·상품별로 여전히 다주택 진입 가능, 시장 흐름 보며 완급 조절해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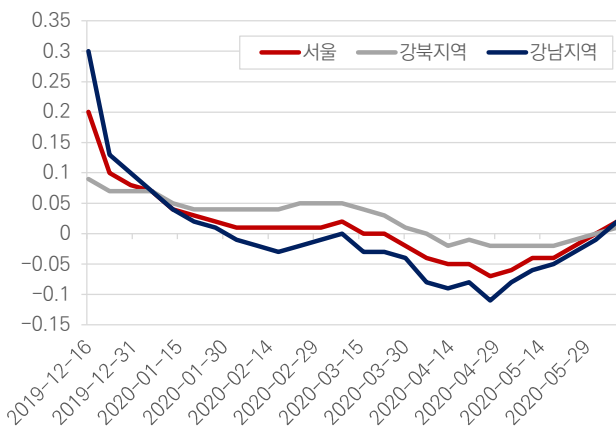
■ 각종 규제와 감염병에 의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주택시장 하락세 종료

-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발표한 2·20 대책,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가격은 6월 들어 재반등¹⁾하며 수요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임.
 - 12·16 대책 발표 이후 지속해서 상승 폭이 축소되었던 주간 아파트가격은 지난 2월 강남 지역부터 하락이 시작되었지만 6월 둘째 주 들어 서울 강남북 지역 공히 상승세로 돌아섬(<그림 1> 참조).
 - 강북 지역은 비교적 변화의 폭이 작았던 반면, 강남 지역은 주간 변화 폭이 여타 지역 대비 큼.²⁾

■ 정부는 상승 반등 원인으로 실수요와 상관없는 투자 수요의 진입을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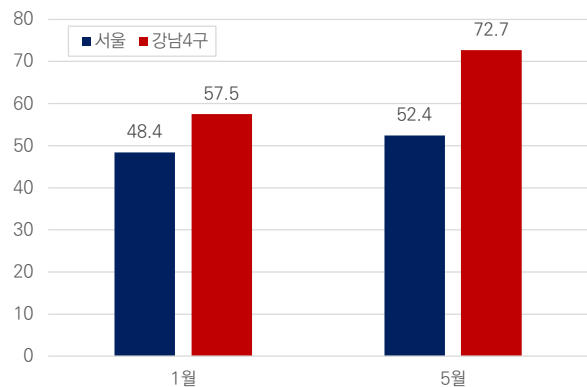
- 올해 5월 제출된 자금출처 조사 결과, 서울에서의 보증금 승계를 통한 거래는 전체의 52.4%로 집계돼 지난 1월의 48.4%보다 4.0%p 증가하였음(<그림 2> 참조).
 - 이는 2018년 9·13 대책 발표 당월의 56.1%를 초과한 것으로, 겹투자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요 겹투자 지역으로 지목된 강남 4구의 경우 5월 들어 72.7%로 지난 1월 대비 15.2%p 증가함.

<그림 1> 지역별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감정원(2020).

<그림 2> 지역별 보증금 승계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6.18).

1)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지수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임. 주간 지수보다 안정적인 시계열을 나타내는 월간 아파트가격 지수의 경우 지난 4월과 5월 모두 하락세로 나타남.

2) 0.3%(2019. 12. 16) → -0.11% (2020. 4. 29) → 0.02%(2020. 6. 8).

■ 갭투자 및 우회 취득 저지,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정부 의지 담겨

-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존 투자 목적의 플레이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내용임(<표 1> 참조).
 -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지역·세금·자금·상품 규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수요자 측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다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주거 정의 달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임.
 - 주택담보대출보다 LTV가 높고, 이율이 저렴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금 투입의 정책적 연원을 생각한다면, 주택 구입을 위한 갭투자로의 전용을 차단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임.
 - 법인을 통한 우회 취득으로 갭투자 수익을 편취하는 행위 역시 개인 자격을 통한 구입보다 LTV가 높고, 세금 측면³⁾에서 유리했던 만큼 부동산 구입에 대한 필요불가결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중산층이 서울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⁴⁾에서 이번 정책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제거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함.

<표 1> 6·17 대책의 주요 내용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갭투자	지역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 정비창 일대에 이어 송파구와 강남구 등 최근 대규모 사업계획이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특히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가 가능) • 경기도,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 • 경기도, 인천, 대전 중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자금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출처조사 강화,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 작성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기간 단축 • 보증자리론 거주 의무 부과
	상품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요건 강화 •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우회 취득	세금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보유 중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 법인 보유 중부세 공제 폐지 •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중부세 과세 • 법인의 주택 양도 및 신규 임대주택 등록시 추가 양도세율 인상
	자금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6.17)를 종합해 저자가 작성.

3)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중부세 및 양도세 등에서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함.
 4) 본 고의 작성 시점 현재, 가장 최신 데이터인 국민은행(2020)의 2020년 1분기 기준 PIR는 11.7로 나타남.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임.

■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갭투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 시장 반응 주목

- 갭투자를 막기 위한 이번 정책이 모두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과 주택 가격에 따라 여전히 갭투자의 문은 열려 있는 상황임.
 - 갭투자의 요건은 ① 절세 가능성과 ② 자금조달의 용이성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음.
 - 먼저, 절세 가능성을 두고 본다면 중저가 주택으로 분류된 공시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절세 유인이 아직 남아 있음.
 - 다음으로,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6·17 대책으로 인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상당 부분 제한되었지만 조정대상 지역의 9억원 미만 주택은 '1주택+1전세'의 형태로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여 대책과 관계없이 전세대출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
 -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중 서울과의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의 가격 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 '풍선효과' 심화, 부동산 대책의 완급 조절 필요

-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는 이미 부풀 대로 부푼 상태임.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부가 강력한 대책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부동산에 투자 수요가 몰려드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꾸준할 가능성이 큼.
 - 대책 자체의 잘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취약점을 찾아 다시 몰려드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통한 가격 상승이 최근 수년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쏠린 수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시장 원리상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잔존함.
- 정부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시장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함.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얼마나 계속될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규제에만 힘을 싣기보다는 투기 수요가 아닌 건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김성환(부연구위원 · shkim@cerik.re.kr)

2021년도 SOC 예산 요구안 24.4조원

- SOC는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중심으로 전년 대비 4.9% 증액 요구 -

2021년 각 부처 예산 요구(안) 총 542.9조원

-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한 수준임
-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 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30조 7,000억원 증액을 요구함.

<표 1> 2021년 분야별 요구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20년 예산(A)	2021년 요구(B)	증감액(B-A)
◆ 총 지 출	512.3	542.9	30.7 (6.0%)
1. 보건·복지·고용	180.5	198.0	17.5 (9.7%)
2. 교육	72.6	70.3	-2.3 (△3.2%)
3. 문화·체육·관광	8.0	8.3	0.3 (3.8%)
4. 환경	9.0	9.7	0.7 (7.1%)
5. R&D	24.2	26.5	2.3 (9.4%)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6.6	2.9 (12.2%)
7. SOC	23.2	24.4	1.2 (4.9%)
8. 농림·수산·식품	21.5	21.7	0.2 (0.6%)
9. 국방	50.2	53.2	3.0 (6.0%)
10. 외교·통일	5.5	5.7	0.2 (2.8%)
11. 공공질서 및 안전	20.8	22.1	1.3 (6.1%)
12. 일반·지방행정	79.0	83.3	4.3 (5.4%)

자료 : 기획재정부.

- SOC 예산은 SOC 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24조 4,000억원을 요구함.

■ 루스벨트 뉴딜 정부는 적극적 시장 개입으로 경기순환 시도

- 1929년 10월 24일 뉴욕증시의 대폭락으로 미국의 경제 불황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됨.
 - 당시 미국 행정부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락하였으며, 193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은 1929년 수준의 56%로 떨어지고, 파산자가 속출함. 이에 따라 실업자가 급증함.
- 경제공황 상황에서 당선된 루스벨트는 6가지 주요 뉴딜 대책을 발표함.
 - ① 「긴급은행법(Emergency Banking Act)」을 제정하여 재기 가능한 은행에 대폭적인 지원을 실시해 은행 안정화를 도모함.
 - ②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을 도입하여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함.
 - ③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제정하여 주요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없애고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여 균형가격을 회복시키려 하였으며, 농민에게 자금을 지원해 농업구제를 시도함.
 - ④ 전국 「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을 제정하여 산업 부문마다 공정경쟁규약을 작성하여 지나친 경쟁을 억제시켰으며, 생산제한·가격협정을 인정하고 적절한 이윤을 확보시킴. 또한,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과 최고 노동시간의 규정을 약속하여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임금을 안정화함.
 - ⑤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VA)를 설립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종합적인 지역 개발을 실행함.
 - ⑥ 민간자원보존국(CCC)·연방긴급구호국(FERA)을 설립하여 실업자와 궁핍자를 구제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기, 보다 적극적인 SOC 투자 추진 필요

- 미국은 세계 경제 대공황시 뉴딜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통화량, 농업 등 분야의 안정화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정이윤의 보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함. 또한, 지역 개발 및 SOC 신규 투자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함.
- 이에 반해 2021년 예산 요구안은 기존 시설물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 투자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판단됨. 보다 적극적인 신규 건설투자를 통해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함.

엄근용(부연구위원·kyeo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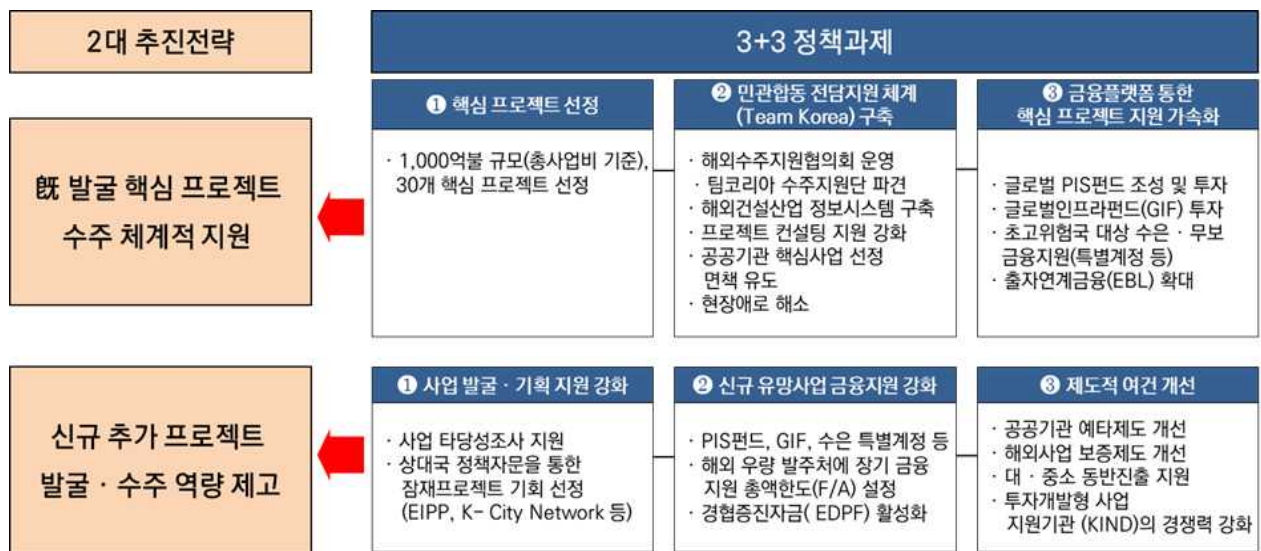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 해외건설시장의 환경 급변, 지원 정책의 탄력성과 지속성 확보가 중요 -

■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의 정책 목표는 정부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⁵⁾

-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은 2대 추진전략(既 발굴된 핵심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역량 제고)과 전략별 3대 과제로 구성됨.
 - ‘既 발굴된 핵심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한 체계적 지원 전략’의 3대 정책 과제는 핵심 프로젝트 선정과 민관합동 전담지원 체계(Team Korea) 구축 및 금융 플랫폼을 통한 핵심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가속화로 구성됨.
 -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역량 제고 전략’의 3대 정책 과제는 사업발굴·기획 지원 강화와 신규 유망사업 금융 지원 강화 및 제도적 여건 개선으로 구성됨.

<그림 1>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의 전략과 정책 과제



■ 금융 지원, 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강화가 핵심

- 이번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미 발굴된 사업 수주를 위한 전방위적 금융 지원에 있음.

5) 2020년 6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3호 안건인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 발주처의 다양한 금융조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PIS 펀드(1조 5,000억원)와 글로벌 인프라 펀드(4,000억원) 등의 신속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
- 동시에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대상의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특별계정(목표액 1조원)을 활용하고,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에 대해 국내 기업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시 자본금 납입용 대출을 지원하는 출자연계 금융을 확대할 예정임.
- 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사업의 발굴과 기획 지원도 이번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임.
 - 투자개발형 사업의 확대를 포함해 새로운 유망 해외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이에 예비 및 본타당성 조사 지원 외에도 사업의 초기 단계에 조사·입찰과 사업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추진기로 함.
 - 또한, 수주 대상국의 관심 국책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공동연구 등 대정부 정책 자문을 확대할 계획임. 이를 위해 중장기 집중 자문 프로그램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의 활용을 확대하고 동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사업 발굴도 추진할 예정임.

■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은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기업의 기술 경쟁력의 총합

- 최근 해외건설은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변동 등 내외부 요인에 따라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국내 기업들은 수주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단순도급형 사업 수주를 위한 기업 간 경쟁 심화와 저가 수주 지양 등 국내 건설기업의 수주 전략도 지난 2009~2011년과 같은 공격적 접근과는 큰 차이가 있음. 결국, 개별 기업 단위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경쟁력 수준이 지속 가능한 수주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음.
-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5개년 중장기 계획인 ‘해외건설진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행됐었음.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시의 지원 방안 마련과 시행이 필요함.
 - 이번에 발표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은 새로운 내용의 지원보다는 기존에 수립되어 시행되어 오던 정책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때문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려면 발표된 지원 방안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탄력적인 보완 및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2020년 1/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성과 안정성 악화, 수익성은 양호 -

■ 2020년 1/4분기 건설업 성장성 지표 악화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건설업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 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이 모두 하락함(<표 1> 참조).
 - 2020년 1/4분기 총자산증가율(전기 말 대비)은 -0.09%로 2019년 1/4분기 2.93%보다 3.02%p 하락하며 마이너스(-) 값을 기록함.
 - 2020년 1/4분기 매출액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1.06%로 2019년 4/4분기 3.17%에 비해 2.11%p 하락함.
- 건설경기 하락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업 성장성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됨.

■ 건설업 수익성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며 양호

- 2020년 1/4분기 건설업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1/4분기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8.16%로 2019년 1/4분기 7.28%보다 0.88%p 상승함.
 - 2020년 1/4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9년 1/4분기 6.16%에서 0.75%p만큼 상승한 6.91%임.
- 낮은 이자율의 영향으로 이자보상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 2020년 1/4분기 이자보상비율 $[(\text{영업이익}/\text{금융비용}) \times 100]$ 은 855.75%로 2019년 1/4분기 604.12%보다 251.63%p 상승함. 건설업 이자보상비율은 2019년 2/4분기 866.52%를 기록한 이후 3/4분기 712.86%, 4/4분기 658.95%로 점차 하락했으나 2020년 1/4분기 상승세로 전환됨.
 - 2019년 1/4분기 4.46%였던 건설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2/4분기 4.40%, 3/4분기 4.19%, 4/4분기 4.39%였으나 2020년 1/4분기 3.79%로 하락하며 이자보상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침.
-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은 전년 동기와 비슷함.
 - 2020년 1/4분기 총자산회전율 $[(\text{매출액}/\text{총자산}) \times 100]$ 은 0.83회로 2019년 1/4분기 0.85회와 비슷한 수치임.

■ 안정성 지표는 전 분기 대비 악화되며 하락세로 전환

- 2020년 1/4분기 건설업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모두 2019년 4/4분기에 비해 악화됨.
 - 2020년 1/4분기 자기자본비율은 49.42%로 2019년 4/4분기 50.92%보다 1.50%p 하락함.
 - 2019년 4/4분기 96.38%였던 부채비율은 2020년 1/4분기 102.37%로 5.99%p 상승함.
 - 차입금의존도는 2019년 4/4분기 17.16%에서 2020년 1/4분기 18.30%로 1.14%p 상승함.
- 건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으로 최근 몇 년간 부채비율이 꾸준히 하락해 왔으나, 2020년 1/4분기 상승세로 전환됨.
 - 부채비율은 2019년 1/4분기 123.78%, 2/4분기 106.04%, 3/4분기 101.85%, 4/4분기 96.38%로 꾸준히 하락하다가 2020년 1/4분기 102.37%로 상승함.
 - 반대로 자기자본비율은 2019년 1/4분기 44.69%, 2/4분기 48.53%, 3/4분기 49.45%, 4/4분기 50.92%로 지속하여 상승했으나, 2020년 1/4분기 하락세로 전환됨.
-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입금 활용으로 인해 꾸준히 낮아지던 차입금의존도도 상승함.
 - 차입금의존도는 2019년 1/4분기 19.79%, 2/4분기 18.20%, 3/4분기 18.02%, 4/4분기 17.16%로 점차 낮아지며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20년 1/4분기 다시 상승하며 악화됨.
 - 차입금 이자율이 하락한 데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업이 차입금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됨.

<표 1> 주요 경영지표

구분		성장성 (%)		수익성 (%)			활동성 (회)	안정성 (%)		
		총자산 증가율 ¹⁾	매출액 증가율 ²⁾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 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건설업	2019 1/4	2.93	-5.97	7.28	6.16	604.12	0.85	44.69	123.78	19.79
	2019 2/4	0.78	-7.12	9.10	7.40	866.52	0.95	48.53	106.04	18.20
	2019 3/4	-0.48	-4.93	6.99	6.10	712.86	0.88	49.45	101.85	18.02
	2019 4/4	0.11	3.17	3.41	4.22	658.95	1.21	50.92	96.38	17.16
	2020 1/4	-0.09	1.06	8.16	6.91	855.75	0.83	49.42	102.37	18.30
제조업	2020 1/4	2.24	-1.85	4.54	3.45	406.85	0.77	59.22	68.86	21.40
전 산업	2020 1/4	1.52	-1.86	4.84	4.14	377.46	0.76	53.20	87.96	25.34

주 : 1) 전기 말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은행(2020.6.16), 2020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속보).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추경, 효과 검증은 필수

예산 부족이나 특정 사유로 인해 이미 정해진 본 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 한다. 추경 또한 국민의 세금을 기초로 마련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지는 민생 경제(民生經濟)를 회생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약 35조 3,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2차 추경액의 합이 약 24조원 규모였으니 이번 추경액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놀랍기만 하다. 정부는 3차 추경이 집행되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2차 추경이 경제회복의 도화선이 되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 1·2차 추경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보자.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입이 적어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생계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정부는 약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가구당 30만~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였다. 이로부터 약 1달 후인 4월 29일에는 약 12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2차 추경의 명분은 고사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약 2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추경 되어 시중에 풀렸음에도 한국 경제 특히,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그리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동네 식당과 가게는 아직도 한산하며 주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여전히 동네에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 지급 방식의 1·2차 추경이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한 것일까? 이번 3차 추경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져 있다.

3차 추경안에 대해 살펴보자. 35조원이 넘는 추경예산 중 약 11조원은 당초 잡은 계획보다 덜 건힐 세 금액을 미리 예산안에 반영하는 세입 경정에 쓰인다고 한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경기 부양을 위해 활용되는 금액은 약 24조원이 남는다. 이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채권 및 증시안정자금 조성,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대,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기초 재원 등으로 쓴다고 한다.

일거리를 잃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여 생활 유지자금으로 활용토록 했던 1차 추경이나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였던 2차 추경과는 달리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포함된 만큼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 듯하다. 더불어 경제회복의 불씨를 남겨 놓는 좋은 방안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3차 추경의 시행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1·2차 추경을 통해 이미 사용된 24조원이 경기회복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적절한 효과 검증 없이 35조원이 넘는 3차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3차 추경예산의 편성 전에 지난 추경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었다면 예산의 적절한 활용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추경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다.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해 추락하는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지라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마련되는 재원인 만큼 추경의 효과는 반드시 검증되어야만 한다. <경기일보, 2020.6.8>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